

A YEAR IN PERSPECTIVE: A GLASS HALF FULL

- BY IRENE KHAN,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한 해를 돌아보며 : 반쯤 채워진 잔

-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네팔의 인권 운동가인 크리쉬나 파하디는 현재까지 스물 여덟 차례나 당국에 구금되었습니다. 2005년 2월 그가 스물 일곱 번째로 체포 된지 얼마 안되, 저는 카트만두의 한 유치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저에게 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낙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자신과 같은 평화적 시위자들을 더 많이 감금할수록 인권 운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널리 만연해 있고 네팔 정부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크리쉬저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종교 서적 이외의 독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당시 그는 바가밧기타(힌두교 마하바다라의 일부분)를 막 통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를 읽을 참이며 그 이후에는 코란을 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스스로의 투쟁,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투쟁이 결국 승리할 것임이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크리쉬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두렵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2006년 발행한 보고서에 기술된 온갖 학대와 불평등,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는 폭력과 위반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계 인권은 약속의 불이행이나 지도력의 실패 따위로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각국 정부는 인권 운동을 옹호할 것인 양 공언하지만 정작 자국의 정책과 실행 문제에 관해서는 억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학대 사례들은 인권 논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학대와 공포는 악순환 속에서 서로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나 기타 국가들의 영역 내에서 무장 집단이 벌이는 잔인하고 격렬한 공격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 테러리즘이라는 명목 하여 5년 간 인권이 퇴보해온 지금, 전환점이 비로소 목전에 와 있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난 일 년에 걸쳐 세계 최대 강대국 가운데 몇몇은 자국과 해외 등지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위험한 행동을 벌여 거북한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애매모호한 발언과 속임수는 언론을 통하여 만천하에 노출되었고, 활동가들의 이의 제기에 부딪혔으며 법정에서도 기각당하였습니다.

또 다른 낙관주의의 신호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는 충돌의 회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그 일 예입니다. 이는 국제적 분쟁 관리 및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주도적 노력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앙골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과 같은 국가에 살고 있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방해하려던 냉소적 정부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UN은 국제 인권 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범죄를 국제법에 따라 심판하라는 요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발칸 반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점점 더 큰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정치적 중립을 잃은 사법 체계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여전히 큰 걸림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류는 적어도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죄를 짓고도 면책되던 관행을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2005년 전범이나 인권사범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재판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지지는 점차 높아져 멕시코가 ICC의 로마규정을 비준함으로써 100번째 비준국가가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르푸르 사태를 ICC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은 안보와 정의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신의 권리와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 공동체, 영세농민, 광부들로 구성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대통령이 사임하고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의 국가 수장이 탄생하였습니다. 민중을 탄압하던 정부조차 대규모 시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권력을 이양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낙관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발전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범세계적 행동주의와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결속이 탁월하게 전개되는 모습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회원이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힘과 노력, G8 회담을 앞두고 “빈곤 타파” 운동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던 엄청난 인파들, 그리고 아시아의 쓰나미,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카쉬미르의 지진 등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돕고자 일반 시민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중국에서 소규모 소작농들이 토지 약탈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였던 일에서부터 유엔 세계여성회의 10주년을 맞아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에 이르기까지 2005년의 사건들은 인권의 개념과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려는 인류의 세계적 활동을 잘 보여주었으며,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강도 높고 힘차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문과 반 테러 주의

자살폭탄 테러가 2005년 7월 런던의 심장부를 공격했을 때 영국의 총리 토니 블레어는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함으로써 응수하며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는 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퇴임한 법관 의원 스타인(Steyn)경은 “법률의 보존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는 정의, 기본적 인권, 그리고 민주적 가치들에 접근하는 것입니다.”라며 올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영국 의회에서 상정한 가장 터무니없는 입법 안 가운데 일부는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반 테러주의에 관련한 법안으로 두 번 패배하였습니다. 이는 9년간의 직무 수행기간 동안 토니 블레어 총리가 처음으로 의회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또한 영국 정부를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내 최고 기관인 상원은 외국 정부가 고문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영국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영국 항소법원에서는 이라크에 주둔중인 영국 군대가 국제 또는 국내 인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영국 무장 군인에 의해 사망한 이라크인 포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판결 또한 내려졌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고문 및 학대에 대하여 면책 받을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미국 관리나 기관이 수감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한 금지규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법률적 개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 동시에 부통령은 중앙정보국(CIA)가 관련 법안의 구속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CIA는 물고문을 심문 기술로 인정했고, 법무장관은 미국 시민이 아닌 이상, 미국이 억류자를 해외에서 학대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반대를 철회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어떤 개정 내용에 의하여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연방법원에 인신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처우와 수감 환경을 조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의사를 철회한 것은 미국 내 강력한 분파에 의해 행정부에 가해진 압력 및 해외 동맹국들 사이에서 증대되고 있는 우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미국의 준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잇달아 공개됨에 따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영토 내에 설치된 비밀 수감지로 알려진 “CIA 비밀 지역”과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와 일부 유럽 정부들 사이의 결탁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는 후 대중들의 강력한 항의가 빚발쳤습니다. 죄수들이 불법적으로 유럽의 공항을 통하여 고문의 위협이 도사리는 국가로 이송되고(“특별 인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대중의 비난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관타나모 만에 있는 수감시설을 폐쇄하라는 요구는 유엔, 수 많은 유럽 기관, 저명한 미국 인사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나 여론 주도층들이 점차 높아지는 이 여론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세함으로써 엄청난 여세를 몰게 되었습니다. 한때 국제앰네스티만의 외로운 외침이었던 것이 이제 미국의 권력 남용이 초래한 가장 떠들썩한 이 상징적 사건에 대한 최고조의 비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 행정부가 관타나모 시설을 폐쇄하고,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비밀 수용소에 관한 진실을 밝히며, 수감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라 심판 받거나 또는 풀려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때까지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변화들이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구속적인 행동에 대한 지지가 자취를 감추었다거나 반 테러주의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특정 형태의 고문이나 학대의 사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위 관리의 연루 여부에 관한 증거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있는 아부 그라브 및 기타 지역에 있는 수용소에서 자행된 학대 사건에서 미국 고위 관리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독립적 수사를

펼치는 데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영국 법원이 기소나 재판 없이 외국인을 구속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밝혔을 때 영국 정부는 즉각 사실상의 가택연금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고문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로 그들을 이송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보장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타국으로 “수출”되는 사례 또한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통해 이집트나 요르단, 예멘 같은 국가들은 기소나 재판 없이도 테러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와 대비되는 2005년의 차이점은 인권 주창자 등의 활동에 힘입어 시민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정부는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는 거짓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정부가 입법 이전에 법원 또는 기타 공개 토의를 통한 설명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인권과 법률이 얼마나 경시되는가를 자각한다면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정책들은 통과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란 결국 법률이 적용되는 사회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분노를 초래하게 할 것입니다. 본 정책의 통과를 곧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돌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총체적인 안보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약하게나마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본 사안에 대한 논의의 전환점의 마련과 미래의 인권과 안보를 향해 좀더 개념 있는 접근이 이루어 질 것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게임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국가에서는 안보도 인권도 수호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무장 집단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비겁하고 포악하게 공격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비난해야만 합니다. 또한 고문으로써 테러에 맞서려는 어리석고 위험한 정부 전략에 강하게 저항해야만 합니다.

개혁안

UN 인권기구에 대한 증대되는 실망과 비난으로 마침내 각국 정부들은 국제 사회에서 UN의 역할에 대한 재 고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국 정부는 몇몇 주요한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UN 가입국들은 UN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의 예산을 두 배로 늘리기로 동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본 기구의 역할을 다양한 범위로 확대시키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UN 회원국들은 불신을 얻고 있는 UN인권위(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회의(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인권회의는 UN총회에 의해 선출되고 UN 회원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인권회의가 너무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지지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인권회의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국가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든 간에 국제적인 합의사항이 한 국가에 의해 손상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정부들이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본 결의안을 위해 단결하여 인권회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각 국 정부들이 UN 인권기구의 변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세계 힘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UN 사무총장이 제안한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을 확장시키는 사안 및 무기 비확산,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한 UN의 효율적 대응과 같은 UN개혁안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더욱 괄목할 사항 인 것입니다.

저는 또한 지난해 있었던 몇몇 공식화된 성과로 고무되었습니다. UN은 “만인의 보호” (the Protection of All)의 국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가 요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종된 사람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체포, 감금, 고문, 그리고 수감자의 죽음. 35년 전 처음으로 실종자들을 대변하여 캠페인을 벌였던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인권보호운동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UN은 인권,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특별 대표단을 선출하였습니다. 비록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도 있지만, 나이지리아, 콩고, 수단에서 석유, 미네랄의 이익다툼에 의해 발생한 폭력상황과 중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정책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보, 통신업체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몇몇 기업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강력한 결속은 인권에 대한 기업의 법적 진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UN 규범에 대한 주요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책임에 관한 국제적 협의사항임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본 규범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과 기업의 기준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과장된 말 그리고 현실

기업은 자신을 통치하는 정치적 신념만큼의 힘만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강대국들이 지역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UN 및 지역기구들을 조작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 예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만이 다가 아닙니다. 카프카즈 산맥과 중앙아시아, 중국의 팽창하고 있는 경제가 어떻게 하여 아프리카 대부분의 억압적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러시아의 보고서는 그 근거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지구적 안보를 지켜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들이 안보리를 마비시키고 안보리가 효율적으로 인권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막기도 한다는 것이 2005년에 증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라크와 관련한 미국, 영국의 행동 그리고 수단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중국의 행위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지구적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인권 존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G8의 위선은 2005년에 특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G8정부들은 아프리카 정부들에게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그들의 논의 사항 중 우선순위를 아프리카 빈곤의 해소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G8중 여섯 국가들이 세계10대 무기 수출국에 포함되어 있고 개국 모두 재래식 무기 및 소량 무기들을 개도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8국가가 효율적인 국가간 무기 통제 체계를 형성하도록 일조해야 하는 특정한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G8의 정상들은 2005년 7월 글레네글레스 회담에서 열린 무기 무역 조약에 협의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무기들을 통제하는 전지구적 조약에 대한 요구는 적어도 5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옥스팜(Oxfam), 소화기에 관한 국제행동네트워크에 의한 캠페인(IANSA)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기 거래는 통제 불가능상태에 다다랐고 즉각적으로 제한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기구로 초점을 옮겨 볼 때, 저는 유럽연합이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유럽연합이 주요 정치, 경제교류 상대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를 묵인하고, 난민, 망명자, 보복테러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관행에 무관심하다면 인권보호에 있어 신뢰와 도덕성회복은 기대하기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체첸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소름 끼치는 인권유린에 기꺼이 맞서야만 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의 압력에도 저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금수조치는 본래 1989년 발생한 잔혹했던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에서의 인권신장에 일조하겠다는 EU의 다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중대한 양보를 얻어낼 때까지 저항은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아프리카연합은 인권신장을 위한 기본 틀을 잘 잡아왔고 토고의 난국을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역량과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수송 제약과 국제법을 준수를 거부하는 수단정부와 무장단체의 방해를 받으며 아프리카연합 인권모니터요원들은 다포에서도 특별한 활약을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연합은 짐바브웨의 끔찍한 인권유린상황에 개입하기를 내키지 않아하였습니다. 라이베리아와 차드의 전 대통령이었던 Charles Taylor 와 Hissene Habre 가 법의 처벌을 받도록 나이지리아나 세네갈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책임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결속을 외칠 때 그들은 그들 자신과 국민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무력함 그리고 정부의 실패를 비난 하는 여론은 아프리카 유럽 혹은 그 어느 국가에서든지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자국이든 해외에서든 인권을 보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와 같은 이들과 여론의 압력이 더해지면서 지구촌은 인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보와 개발의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인권이란 반드시 고려되고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안전과 발전 모두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적·지역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인권이 각 기관, 또는 개인의 신뢰와 권위를 위한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얀마가 ASEAN 의 의장직을 맡는 것에 한 국가간의 논쟁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럽이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반대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인도가 네팔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인권문제에 비중을 둔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실제적이며 원칙적인 근거에서 보았을 때 인권문제는 좋은 세상을 위한 부수적인 선택사항이 아닌 국제적·지역적인 지속 가능한 안보전략의 중대한 요소로 생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2005 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정부의 정치 도덕적 권위란 자국뿐만 아닌 국외에서도 인권에 대한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근 일어난 인권 운동의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인 것입니다.

분명 이를 이루는데 선행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의를 품은 무장 세력의 공격. 증가하는 중동의 불안정.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이슬람 공동체의 고립과 분노. 잊혀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분쟁. 불평등의 증가와 지독한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인권이 매일 위협받고 있는 양분된 세상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행동을 일으키는 추진력을 마련 해 줄 것이며 어찌면 더 큰 운동이 이를 통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006 년의 협의 사항을 설정 하였듯 국제앰네스티와 수많은 회원 그리고 지지자들은 괄목할만한 인권운동 성과 그리고 인권의 힘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일원인 우리는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두려움과 혐오를 퍼뜨리는 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세계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의 근시안적인 비전에 도전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약속 :

2006 년,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사항들을 약속 합니다.

- 인권에의 공격에 저항합니다. 특히 고문과 학대는 철저히 금지합니다.
- 관타나모만의 강제수용소와 비밀 구금시설의 폐쇄, ‘임시 송환’과 ‘유령 억류자’에 대한 발표를 요구합니다.
- 무장 세력의 민간인을 향한 고의적인 공격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 고의로 형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적·국제적 재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싸웁니다.
- 무력충돌이 있는 동안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폭로하고, 작은 총기류의 판매도 국제무기거래조약이 관장하도록 캠페인을 벌입니다.
- 사형제의 폐지를 위한 단계로 보편적인 유예기간을 요구합니다.
-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 망명자, 추방된 사람들, 이주자들의 보호를 장려합니다.
- 가난과 인권의 연결고리를 밝히고 모든 인권의 존중을 통해 가난을 근절하도록 정부에 책임을 지웁니다.
-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학대의 책임을 지도록 캠페인을 벌입니다.
-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필수적인 일급 가지 핵심 인권조약들의 비준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 평등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지지합니다.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6

GLOBAL OVERVIEW

인간의 안전보장 모색

2005년은 각국 정부가 일련의 주요한 난제에 직면하였던 해였다. 이러한 과제에는 다루기 어려운 분쟁,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행된 공격, HIV/AIDS의 극성스런 전염, 극빈층의 확산, 자연재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인권 원칙에 기반하여 대처함이 마땅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러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개별적으로나 총체적으로 보더라도 역시 각국 정부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경제적 명목 하에 인권을 비밀비재하게 희생시키졌다.

이에 따라 세계 전반에 걸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전 지구적 위협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책임성, 투명성, 역할 분담을 보다 많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빈곤 종식”라는 슬로건을 등에 얹고 동원된 거대한 수의 참여자들부터 법정 재판에 있어 강력한 역량을 지니는 법률가와 활동가 전반에 걸쳐, 시민 사회 스스로는

자신의 역할을 각국정부에 전달하고자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2005년은 법률 규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 보장을 위해 필수사항임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 한해 이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수반되는 인권 원칙 붕괴가 우리를 안보로 인도할 길이 될 수 없음에 대한 인식도 커졌다. 비슷한 맥락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며 보호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는 바로 심각한 권리침해와 인권의 발전의 부정요소로 되었다. 자연 재해나 정치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이들의 다급한 필요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뒤로하고라도 평범한 이들로 구성된 활동가들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정부 기관들에게 수치를 주게 하는 것이었다.

인권이란 학살, 테러 공격이 자행 되는 전시(戰時)에서 만이 아니라 기아(飢餓), 질병, 자연 재해 시에 개개인과 지역사회가 안전해야지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2005년 전반에 걸쳐 활동가들은 요주의 인권 침해자들과 막강한 다국적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동시에 민족주의, 인종차별, 사회적 배척의 종식을 위해서도 힘썼다.

2005년 조사된 인권 침해의 많은 사례는 국경지방을 가로질러 발생하였다. 이곳에서는 고문과 소위 죄수들에게 행해진 “인도”뿐만 아니라 무역과 정치 원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동시에 국제 관계적 관점에서 둘 때 국경이 해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주로 이민자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거래를 계속하여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이 맞이하고 있는 위협의 현 주소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를 인식하는 것은 테러리즘에서부터 조류독감에 이르기까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UN의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기시켜 주는 예들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는 불량 국가를 저지하는 사안에서

보여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지속적인 실패, “원유를 통한 식량 지원 스캔들 (the Oil for Food scandal)” 에서 폭로된 심각한 수준의 UN 부패, UN 새천년 개발 목표(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따랐던 실패를 침묵으로 환영하였던 것, 국제 금융 규정이 불공정한 무역·원조·채무를 바로 잡기 위한 미비한 노력 등이 그 사례로 남아있다. UN 자체의 지도력이 상당히 비현실적인 결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9월에 있었던 UN세계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제한적인 성과는 지엽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자간 상호 자유 무역 옹호론을 지지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법제도를 국제 범죄형사재판소 대로 통합하려는 과정이 진행 중이 있으며 국제 특별위원회 법정과 치외법권의의 사용을 더욱 증대시키는 일 또한 그 과정 중에 있다. UN 고등 판무관실에 더 많은 인권 사례가 접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지 몇 년이 지난후 일년 예산이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 UN 인권 회의에서 일어나는 인권에 대한 UN의 상당히 손상된 신용을 회복 시킬 것에 대한 제안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고무됨과 동시에 세계 인권 단체의 다양성과 역량의 강화에 힘입어 AI는 정의의 세계화에 대한 공약을 인권 보호를 간구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자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새롭게 정의하는 바이다.

고문과 테러

2001년 11월 11일 미국에 가해졌던 공격으로 인권 운동이 직면하였던 각성, 그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 기구는 인권이란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기 보다는 방해물이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운동가들 및 그 협력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인권이란 것이 안전을 위해 그리 주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정부 기구의 활동에 저항하며 비판을 가할 수 있었다.

정부적 자원과 노력이 테러리즘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은 많은 국가에서 여러 영역이 사안을 지지하는 개인과 무장단체가 가한 수많은 공격이 일어난 해임을 알 수 있다. 계획적인 민간인 공격, 기본적인 인권 원칙의 파괴의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실례로 10월 인도 델리에서는 연간 축제 기간이 한참인 시기에 여러 개의 폭탄이 폭발함으로써 66명의 사망자와 2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라크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이 한해 동안 무장단체들의 공격으로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11월 요르단에서는 암만의 호텔에 3개의 폭탄물이 폭발하여 60명이 사망하였다. 6월 영국에서는 런던의 대중 교통에 폭탄물의 공격이 가해져 52명이 사망하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테러리즘 반격 기술을 받아들인 일부 정부는 인권을 비웃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심지어 학대 수단을 합법화 하거나 정당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제 단체의 저항으로 불법화 하기에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이지만 실상 앞으로 정당화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의 반테러 작전의 일부는 인권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불법적인 폭력을 합법화 혹은 정당화시키려 시도한 몇몇 정부까지 있는 실정이다.

테러혐의를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미국에서

운영하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예전에 군사나 보안 작전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이나 미국연합국들에 의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었던 약 14,000명은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쿠바의 관타나모 만과 이라크에 구금되어 있다. 관타나모의 여러 구금자들은 자신들의 억류 상황에 저항하여 단식 투쟁을 벌였으나 그 결과 강제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였다.

테러 혐의자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감금되었는데, 그 중 몇은 이집트, 요르단, 영국, 예만을 포함한 곳에서 장기간 동안 합법적인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억류되었다. 다른 혐의자들의 경우 고문이 상습적인 나라로 강제 추방되는 위협을 받으며 감옥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많은 구금자들이 고문이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

200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폭력적인 방침과 실습을 테러에 반한 전쟁이라는 명의로 지지하였는지 밝혀졌다. 이러한 지지에는 고문, 부적절한 대우, 기밀로 이루어진 무제한적인 구금이나 강제 이주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상당수의 정부에게는 이러한 지지에 대한 큰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방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법을 결정하는 일도 있었다. 미국 정부 내에서까지 기초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일어났다.

2005년에 계속해서 공개된 정보에서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여러 주에서 개발된 비밀과 폭력적인 방침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특명 인도’이라 하여 테러 혐의자들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아무런 절차 없이 불법 수송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방침을 이용하여 미국에서는 혐의자들을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등, 고문이나 부적절한 대우를 하는 나라들로 수송하였다. 이런 수송은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고문 하청을 도와주는 것이었던 것이다.

현실적인 ‘인도’의 참 의미는 2005년의 무하마드 알-아사드의 사건이 잘 설명하고 있다. 탄자니아에 사는 예멘인인 그는 Dares-Salaam에 있는 그의 집에서 2003년 12월 26일에 체포되었다. 두건과 수갑으로 결박된 채 그는 미지의 장소에 버려졌다. 그 때부터 16달이라는 기간의 불법 감금과 심문 등의 호된 시련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그는 외부와 아무런 접촉도 하지 못하였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조차 없었다.

그는 기밀 시설에 한 해 동안 감금되었고, 그 동안 모든 감각을 잃을 만큼 심한 고문을 받았다. 마스크를 쓴 간수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로 지시를 하였다. 지속적으로 저음의 백색 소음을 들어야 했으며, 하루 24시간 내내 인공 등이 켜져 있었다. 무하마드 알-아사드의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의 관리 하로 넘어갔으며,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가족은 그가 2005년 5월에 예멘으로 넘겨지기 전까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 무하마드 알-아사드는 미국 당국의 요청 하에 감금되었으며,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한 채 2005년 말까지 억류되었다.

2005년 동안 AI에서 수집한 다른 혐의자들의 증언은 놀랍게도 무하마드 알-아사드가 묘사한 경험과 유사하였다. 두 명의 다른 예멘 남자들은 2005년 5월에 미국에 의해 예멘으로 수송되었으며, 그 해 말까지 아무런 재판 없이 감금되었다. 2005년 6월과 9월, 10월에 AI와 한 세 번의 인터뷰에서, 모두 미국에서 운영되는 기밀 감금기지에 16에서 18개월 동안 갇혀있었다는 증언을 받을 수 있었다. AI에서 집행된 인터뷰들은 미국에 의해 세계 여러 곳에 분포되어있는 기밀 유치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였다.

2005년 12월에 영국 외교부 사무관이 2001년 초반 이후로 강제 수송이나 영국에 있는 여러 감금시설을 이용한 예가 없다고 발표하자, 이후 AI에서는 영국에서 구금자들을 그들이 납치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수송하여 고문이나 다른 부적절한 대우를 받게 한 세 개의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005년에 특히 이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밝혀진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 증거가 희생자들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이고, 한 편으로는 정부에서 이를 밝히고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기밀 수송에 관련이 되 있을 것이라며 조사를 요구한 데에 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수송 사건의 자세한 경위에 대해 정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조사되었고, 스페인 당국은 CIA의 항공기의 자국 공항 및 공역 이용여부를 조사하였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관계자들과 정당 활동가들이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5년 언론인과 AI 및 기타 관계자들이 조사한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암흑 지대(black sites)"로 알려진 은밀한 감옥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IA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요르단, 파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과 영국령 인도양 식민지인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를 비롯한 유럽과 타 지역의 미지의 여타 장소에서 그러한 비밀스러운 억류 기지를 운영하였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온 바 있다. 높은 정보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된 30명 가량의 억류자들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자취를 감췄고" 법의 보호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암흑 지대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유럽이사회는 미국의 비밀 감옥과 유럽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주 사건 사이의 연계 사안을 조사 발표하였다. AI는 유럽이사회 간부들이 주장하고 있는 본 발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유럽 이사회 간부 중 한 명은 "무지가 의도적인 것이었든 우연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모른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라고 공언한 바 있다.

AI와 영국에 본부를 둔 런던의 NGO Reprieve는 11월 개최된 연합 회의에서 예전에 관타나모(Guantanamo)나 영국 기지에 억류되었던 이들과 현 억류자들의 가족들이 고소나 재판 절차가 생략된 채 무한정 억류되고 있는 인권 학대 실상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억류자 가족들은 자신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4년 동안 관타나모에 억류되었던 보스니아(Bosnia)와 헤르체고비나(Herzegovina)의 보델라 하드즈(Boudelaa Hadz)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엄마 노릇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돌볼 시간도 없었고 저 혼자였으니까요. 밤에 아이들을 재운 다음에야 저는 제 일을 시작했죠. 온 세상이 평화롭게 잠든 동안 저는 지칠 줄 모르고 소송과 청원서와 서신을 작성하였습니다. 법과 인권 관련 협정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삶을 위한 나의 투쟁을 계속하고 제 남편과 다른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요."

정부는 그곳에 수감된 사람들이 이송될 수 있도록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에 "외교적 보장"을 수년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 2005년 영국 정부는 외교적 보장에 의지하기로 하고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알제리아, 이집트, 그리고 해당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려 모색하였다. AI는 그러한 "외교적 보장"은 절대적 고문 금지에 방해가 되며 잠재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많은 정부들이 고문을 외부로 위탁하는 것에 관여하고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이로써 인권에 대한 책임이 국가 경계를 초월하는 현 세계에서는 보다 큰 초국가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수십년 간 항시 모든 상황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고문을 자행했던 미국과 몇몇 유럽 동맹국들은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이것은 바로 본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문과 부적절한 대우가 정당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라는 구실로 특정한 형태의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재정의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죄수 처우에 대한 미국 입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미국 법무장관인 알베르토 곤잘레스(Alberto Gonzales)는 자국은 자의적으로 고문을 정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 지도자가 정부에서 고문을 묵인하였다는 점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CIA가 비밀 감옥에 억류된 죄수들을 워터보딩(water boarding)으로 고문하거나 수갑으로 장기간 결박, 저체온증을 유도하였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미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특정한 형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저지르는 관행은 테러리즘을 저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사용될 경우 용인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가 미국 국내외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미의회는 연말에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대우에 대한 금지를 확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미래의 인권과 안보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접근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반테러 정책의 맥락에서 인권 확대는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에게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평화적 시위자들이 살해당하였던 안디잔(Andizhan)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참여를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공정한 재판 이후 "테러리스트"로 선고를 받아 충분한 증거 없이 항거 운동에 참여한 죄로 인하여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 라는 화두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에서 일어나는 가혹한 억압을 본 명목 하에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인데 결과적으로 중국 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위구르족 공동체에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중국의 범죄 소탕 운동("strike-hard")은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잠잠해 졌지만 2005년 5월에 XUAR에서 "테러, 분리주의, 종교적 과격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본 운동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그 결과 비공식 사원을 폐쇄하고 평화적 활동가를 포함한 이맘교도(imams)들을 체포했으며 억류 또는 투옥이 이어졌다. "분리주의자" 또는 "테러리스트"로써의 죄상이 심각하다고 간주된 이들은 장기간 투옥 또는 사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혹한 처우의 실상을 해외에 알리려 한 이들에게는 자의적인 억류와 투옥이 뒤따랐다. 당국은 죄목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은 채 위구르 활동가들을 테러 혐의로 계속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 법안에 따라 테러 용의자 고발 없이는 억류를 연장할 수 없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고발이나 재판 없이 국내 보안법에 따라 수십명의 사람들이 억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케냐와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반테러 구호를 앞세워 인권 옹호자의 입을 막고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억압적 법안이 정당화되었다.

2005년 한 해 동안 반테러라는 미명 아래 정부에서 저지른 불법적 관행이 폭로되면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인권 운동가, 법률가, 기자, 그 밖의 수많은 사람들의 결연한 노력이 테러 혐의를 받은 이들을 이송하고 억류하고 고문한 정부의 은밀한 행태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였다.

2005년에는 안보를 구실로 고문을 통해 강제로 얻은 정보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국가들의 추세를 저지하려는 시민 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연말에 주요한 사법적 쟁거가 있기도 하였다. 재판 과정상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 수세기에 걸친 금지조약을 뒤집으려 하였던 영국 정부의 법정투쟁이 실패로 끝난 것이다. AI는 이 소송에 관련하여 고문과 부당한 대우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의 금지를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는 테러에 맞서 싸우는 노력의 도덕적 무결성과 실질적 유효성 모두를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2005년을 통해서 정부는 법 준수 책임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이 근본적 안전의 훼손을 예방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갈등, 그리고 그 여파

전 세계적으로 무력 갈등의 수는 계속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멈춘 것은 아니다. 폭력이 지속됨으로써 수년간의 파괴적 갈등에서 비롯된 해소되지 않는 불만과 가해자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쉽게 무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 전 인류의 소외와 빈곤화, 구조적으로 만연한 부패, 인권과 인도주의 법률의 총체적 침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실패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고난에 직면해 있다. 정치 지도자와 무장 집단, 그리고 일부 국제 사회의 집단적 실패로 인한 갈등은 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 사회로부터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갈등의 여파에 방치된 채 불안정과 기아, 거처 없는 방랑을 감내 해야만 하였다.

갈등을 종식시키고 협상문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실패한 정부와 무장 집단으로 보통 사람들의 인권은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몇몇 정부는 이쪽 저쪽 편을 들며 타국에서 일어난 갈등을 이용하려 하면서도 그 책임은 부인하였다. 국제 사회가 UN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를 통해 교전 집단을 압박하는 지원을 결집할 때 당사자들은 수단과 코트 디부아(Cote d'Ivoire)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군과 무장 집단은 정치·경제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민간인들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군사적 전략의

일환으로 특정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기도 하였다. 2005년도 무장 갈등의 희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여성과 소녀들은 모든 전쟁에 수반되는 폭력에 노출되었고 특정한, 주로 성적인 학대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소녀들은 자신의 남성 친척에 의해 총기류와 교환되었다고 한다. 콩고공화국에서는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무장 군인들에게 납치, 강간당하였다. 전 세계 거의 3/4 분쟁지역에서 아동들이 군인으로 모집 되고있다.

세계가 이라크, 수단, 이스라엘/점령된 땅(Occupied Territories)에 주목하고 있던 사이 아프가니스탄, 체첸(Chechnya)/러시아 연방, 네팔, 북부 우간다, 기타 세계 변방 지대는 쉽게 잊혀졌다.

미국 주도하의 다국적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단체와 과도 정부가 무장하고 있다. 무장단체는 일반시민을 계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장단체는 인권단체를 타겟으로 삼아 인질을 고문·학대하였다. 사담 후세인 재판에 맞았던 2명의 피고측 변호사가 살해 당한 사건은 이라크의 고질적인 불안을 재차 확인 시켜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많은 이라크 여성과 소녀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라크 그리고 비이라크권 여성 정치인, 활동가, 언론인들이 납치되거나 살해 당하고 있다. 2005년 동안 미국 주도하의 다국적 병력과 외국 민간 안보 요원들 역시 비무장 시민을 살해하고 수감자를 고문하는 인권 유린에 가담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학대에 대한 올바른 조사를 실시하며 책임을 묻고 주둔 병력과 과도 정부가 제기한 은밀한 주장을 해명하는데 실패하였다.

소위 철수 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졌던 약 8,000여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가자 지구에서 이동시킨 일은 약 450,000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국제법의 횡포로 거주하는 서쪽 제방에 처진 600km에 이르는 통제된 장벽과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지속적인 이스라엘 영토 확장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쪽 제방의 마을 사이에 거주하고 있던 2백만 명 가량의 팔레스타인의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군대가 엄격한 제한 조치(검문소 및 봉쇄 정책)를 취하게 한 주요 이유는 바로 이 지역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 있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함으로써 이들의 경제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점유지, 일터, 교육과 의료 기관으로 접근하는 것까지도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팔레스타인 이들 사이의 빈곤과 실업, 실망감을 증가시켰다.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많은 젊은 거주자들이 이스라엘과 자신이 속한 사회 모두를 대상으로 연속적인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거리와 가정에서의 불법과 폭력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 두 지역 모두에서 살인 사건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약 5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90명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가한 무력으로 사망하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6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50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이는 2004년의 700명의 팔레스타인과 109명의 이스라엘 사망자에 비해 양쪽의 사망자 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2005년 폭력 사태를 마감하기 위해 정치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다피에서는 잔학 행위가 계속되었다. 수단 정부와 연합군(잔자위드)은 폭탄 공격을 통한 시민 살해, 마을 침략,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 거주지에서 마을 주민들 강제로 추방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다. 저항군사세력의 만행은 경쟁 세력간의 당파 싸움과 내분으로 명령 구조가 무너지자

더욱 급증하게되었다. UN사무총장 및 UN 산하기구의 표현을 빌자면 다퍼에서의 폭력사태는 널리 퍼져있으며 조직화된 인권 침해 및 인권법 위반, 부맥만 인구의 강제 이동, 심각한 기아상황과 전반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가져오는 공포와 끔찍함으로 고분고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초 UN 평화 조약 협상으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아프리카 연합(The African Union)은 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시민을 보호함에 있어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은 몇몇 군사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병집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UN조사단은 해당 정부와 잔자위드 군부가 국제법에 접촉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밝혔으며 다퍼의 재판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위임하였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검사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말까지는 수단을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2005년 한해 동안 국제 사회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지 않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많은 일들이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특히 여성과 여자 아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 소년병 징집, 무죄 판결의 반복과 같은 일들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분쟁은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소형무기와 경량무기류가 사용되었다.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자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고 있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를 찾기는 거의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과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한 정부가 시민들을 무장시킨 경우도 일부 있다.

40여 년 간의 콜롬비아 내란 후, 자국의 모든정치세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군사진영과 무장단체의 무장 해제 및 해체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본 법안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들에게 면책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점은 우려를 낳았다. 동시에 군조직이 해체되었다고 알려진 곳에서도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당국 정책은 불법 무장 단체에 가담하였던 이들을 일반 서민의 삶에 유합시키려 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다시 이들을 분쟁으로 몰아 넣을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사태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러시아와 체첸의 국방 안보 군사 세력은 체첸내의 급습을 지휘하였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은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여성들은 러시아와 체첸 군사들에게 강간당하거나 강간당할 위협을 받았다. 체첸의 반대 무장 군사 세력은 민간인 공격과 무차별 공격과 같은 만행에 가담하였다. 코카서스 북쪽 공화국에서 역시 점점 더 많은 인권법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네팔의 인권 상황은 2005년 2월 비상 사태라는 명목 하에 급격히 악화되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고 언론 검열이 엄격해졌다. 군인과 모택동 주위자들은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다녔다. AI는 비상 사태 후 즉시 네팔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도, 영국, 미국과 네팔의 주요 군수업체에 네팔 정부가 인권 침해를 멈출 때까지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벨기에, 독일, 남아프리카, 인도에서 제작되는 헬기의 부품을 주로 제공하는 프랑스에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하였다. 일부 국가는 무기 공급 중단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중국은 네팔에 무기와 군수품 공급을 멈추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상태의 해소, 면책을 다루는 문제, 무기 확산의 통제 사안의 실패는 분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폭력상황을 낳았다. 심지어 평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나라들에서조차 이러한 합의가 존중되고 신뢰 속에 이행될 것을 보장할 만한 정치적 의지가 빈약하다 하거나 기타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속적인 무법상태 및 치안부재와 박해로 인해 수백만의 생명이 사라져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권력을 휘둘러온 각 분파 지도자들이 대량의 인권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 되었다. 법의 지배력 부재는 반인권적 폭력의 희생자를 무수히 낳았고, 형사사법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과 연합군, 그리고 무장 단체에 의한 공격 속에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되기도 하였다.

코트디부와르는 흔히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재앙에 가까운 경기후퇴가 갑작스럽게 국내분쟁을 촉진하였다. 소형무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은 휴전협정 위반, 서부지역에서의 종족 간 분쟁, 외국인 혐오와 끊임없는 소년병사 동원에 공헌하였다. 이 나라에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려는 아프리카 연합(A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장해제와 민간 복귀 및 재통합의 과정은 교착상태에 머물렀다. 지난 10월, AI는 소형무기 확산과 유통 및 유엔 무기금수 조치에 위반한 양측 분쟁 당사자들에게 다시 무기가 공급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분쟁을 극복한 몇몇 국가에서조차 지배적인 면책 문화와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 실패는 지속적인 폭력의 악순환이 조장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와 무장반군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의 인권보장 장치가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2005년의 치안상황이 악화되었다. 쓰나미와 무장분쟁에 기인한 내부적 무질서도 희귀 자원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면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수십 년, 혹은 수 세대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서 살아남은, 소위 “위안부”들은 반 세기 이상 일본 당국이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으나 세월이 흐르고 이들이 노쇠해 짐에 따라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2005년 일본 정부는 수천 명의 위안부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보상할 것을 다시 한 번 거절하였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암흑한 상황 속에서도, 분쟁을 극복한 많은 나라들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은 다행이다. 또 시에라리온은 상황이 더욱 안정되어 UN군이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서(西) 사하라의 독립을 요구하는 폴리자리오 전선은 14년 전에 공식적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억류하고 있던 404명의 모로코인 전쟁포로들을 석방하였다. LRA 지도자들이 북부 우간다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면책 극복을 위한 노력도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포를 먹고 산다: 정체성에 따른 고통

문화적 경계가 흐려짐으로써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계를 극복하는 교류보다는 세계화의 조류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일부에서는 인종주의, 차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증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세계 전반에 걸쳐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취향 등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의 기류 속에 보다 인내심을 잃고 공포가 횡행했던 2005년은 각 정체성 집단 사이의 분열이 지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었다. 무슬림과 무슬림으로 지목받은 사람들, 그 외 소수자들, 이민자와 난민들이 희생됐다. 유럽 등지에 거주하는 일부 무슬림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포위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공습을 피해 다녀야 했으며, 동시에 “테러 위협”과 “외국인”, 그리고 “무슬림”을 연관 짓는 일부 정부와 언론매체들에 의해 조장된, 한층 심해진 인종차별주의를 경험해야 하였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젊은 무슬림 남자들이 “전형적인 테러리스트”로 묘사되는 가운데 많은 무슬림들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차별적인 반(反) 테러리즘 조치에 고통 받았다.

억압적 정권들은 그들의 권력을 옹호하거나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억누르기 위해 소수민족이나 종교적 소수자들을 그 타겟으로 삼았다. 시리아와 이란에서의 쿠르드족에 대한 처우가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월 이후 서부 이란의 쿠르드족 거주지에서의 민간인 소요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으로 최대 21명이 살해당하였으며, 적어도 190명이 부상 당하고 체포된 숫자는 더 많다. 이란은 인구의 절반이 페르시아인이고 그 나머지가 쿠르드인, 아랍인, 아제리 투르크인 등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쿠르드족 지역에서의 대규모 체포와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은 이란의 소수민족 학대의 표본이 되었다.

시리아에서도 쿠르드 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 사용에 대해 제한 받는 등, 지속적으로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다. 시리아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의 쿠르드 족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는 물론이며 교육, 보건, 취업 등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0년 만에 개최된 의회에서 여당인 바트 당은 1962년의 통계조사 결과를 검토하라고 명령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없는 쿠르드 족이 시리아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종교의 관점에 대한 도전에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국가도 일부 존재한다. 이집트의 최고국가안전법정에서 미트왈리 이브라힘 미트왈리 살레(Mitwalli Ibrahim Mitwalli Saleh)의 재판을 최소한 7번 이상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와 이슬람 여자신도와 비 이슬람 남자와의 결혼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인 견해에 의해 아직도 행정적 억류상태에 놓여 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법에 의하면 아마디아 교단 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마디 교인에 대한 살해사건의 경찰 수사는 느리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모토사이클을 타고 지나가던 남자들이 그들의 사원에 총을 난사한 단 한 사건으로 8명의 아마디 교인이 죽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즉시 18명이 체포되었지만 무혐의로 모두 풀려났다. 중국은 공식적인 절차를 벗어난 종교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종교적 활동에 대해 보다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4월부터 파룬궁의 정신적 활동에 대해

다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베이징 정부는 이 집단이 “이단 조직(heretic organization)”이므로 활동을 금지하며 파룬궁에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불법행위라고 선언하였다. 파룬궁 수행자들은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05년 한해 동안 에리트레아 정부는 복음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였으며 2005년 말에는 1,750명 이상의 교회 교인들과 수십 명의 이슬람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구금 당하였다. 그들은 기소, 재판, 정해진 시간도 없이 외부와의 단절상태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비밀장소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은 철제 해운 컨테이너나 지하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인종적 “순수성(purity)”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미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취업과 교육에서 배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소수민족 출신의 상당수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상급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학대 받거나 임의로 구금되거나 불공정한 재판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 투옥되는 위험에 놓여 있다. 라트비아 정부는 2005년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위원회(Council of Europe’s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를 비준하였으나 정부가 정한 소수민족의 정의에 의하면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민족의 자격요건에서 실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원주민들은 하류층에 머물러 있으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국제 원주민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에 관한 논의는 근 10년 동안 답보상태이다가 2005년에는 그 과정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원주민의 권리 인식과 존중에 대한 국제사회의 느린 반응은 개별 국가에게도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주민 거주지역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경계설정과 비준은 원래 약속했던 수준과의 괴리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원주민 지역사회는 안전을 위협받고 부당한 공격을 받으며 강제로 퇴거 당하고 있어 이미 심각하였던 경제적 빈곤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원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특별 고문관이 2005년 뉴질랜드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이 고문관은 마오리 족과 기타 다른 주민들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더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오리 족은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이유로 수 세대에 걸친 약속 불이행 적체와 경제적 소외, 사회적 배척, 문화적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자본과 상품이 자유스럽게 드나 들 수 있도록 장벽이 허물어 지는 전례 없는 국제화 시대에 국경선을 넘나 드는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어느 때보다 규제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민 노동자들은 그들을 초청한 국가가 그들에 의해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공격과 부당한 대우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약 2억의 이민 노동자들이 자신의 출신국가를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다. 태국에서 일하는 버마의 농업 노동자로부터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인도의 가사 노동자에 이르기 까지 전 세계의 이민 노동자들은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용주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놀랍도록 미미하여 정의가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 노동자가 정부에 적발되면 그들은 임의로 구금 당하게 되고 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추방당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처럼 지중해 연안국가에서도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인권을 분명하게 경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북부 아프리카의 스페인영인 세우타와 멜리야 이민족 거주지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저지당했고 강제적으로 모로코로 이송되었었다. 사하라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단적인 가난과 탄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던 이민자와 난민들은 모로코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구금되었다. 일부는 알제리로 추방되었으며 일부는 알제리와 모리타니아 국경지역에 위치한 사막의 고립지역에 소량 혹은 아예 음식도 없고 운송수단도 없는 상태로 남겨졌었다. 이태리와 그리스 이민자들과 난민들도 지속적인 구금상태에 있거나 매우 부적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이민자의 권리 강화를 거부하고 있다. 2005년 12월까지 단 34개 국만이 모든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비준하였다. 20개국이 이민 노동자 유엔 위원회에 자국의 이주 노동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말까지 단 두 나라만 보고한 바 있다.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와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국가간의 상호 합의에서 종종 이민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 즉, 초청 국가와 출신 국가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상관없이 한 인간을 “용역 제공자(service provider)”나 “개발 대리자(agents of development)”와 같은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비공식적 경제분야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이민자들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서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을 초청한 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기여도는 공개 토론에서 간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외국인 혐오자 들이 이민자들을 너그럽게 여긴다거나 받아들이는 것에 반한 인권 학대의 기류를 고무시키려는 것이다.

여성 이민자들은 특히 성과 관련된 인권 침해의 위협에 처해 있다. 어느 해외 가사 노동자는 혼외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있는 샤리아(이슬람 율법) 법정에서 150대의 채찍형을 선고 받았었다. 많은 여성 이민자들은 악덕 무역상과 고용주에 의해 성적 착취를 당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나라의 제도적 차별에 직면하기도 한다. 쿠웨이트에 일하러 온 인도 여성은 강간당한 후 임신하였고 출산 후 감옥에 갇혔으며 그녀는 아기 아버지의 승인이 없으면 그 나라를 떠날 수 도 없게 되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사태는 2005년 여성에 대한 폭력 중지 국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AI가 작성한 여러 중요 보고서에 기록된 바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소녀들과 여성들을 때려서 눈을 멀게 하거나, 석유를 끼얹은 후 불을 지르거나, 강간당한 것을 신고하였다고 감옥에 넣거나 그들의 남편이 자신을 죽인다고 위협하였다는 것을 감히 신고하였다고 살해하기도 한다. AI의 보고서는 스페인에서 벌어진 가족 폭력사건을 분석하면서 학대 받는 관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여성이 처한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로마 족 이민 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 불구 상태에 있는 경우 성에 기초한 폭력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와 경제적인 도움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2005년 한해 동안, AI는 사법제도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과테말라에서는 여성의 납치와 살해에 대한 수백 건의 사건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절하게 조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자신도 이러한 사건의 40 퍼센트는 문서로만 작성되고 조사는 결코 착수되지 못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업무태만은 이 범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자기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를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국가에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만연한 차별과 폭력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구속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라트비아는 LGBT들의 권리를 위해 처음 열린 게이 프라이드 행진(Gay Pride March)을 막으려 하였다. 라트비아의 국무총리와 다른 고위 인사들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 행진에 반대 하면서 불 관용과 혐오 분위기를 조장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동성 결혼”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35명의 남성들이 태형과 구금형을 선고 받았다. AI의 미국 주요 보고서는 LGBT들이 경찰이 가하는 인권탄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LGBT들에 대한 차별은 평등한 법의 보호와 탄압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주목할만한 것이다.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에서 체포된 60세의 동성애자는 AI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난 아무 잘못도, 누구를 다치게 하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심공원에 동성애자인 제가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특정한 한 집단을 가려내어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부당한 일은 없습니다.”

한 인간의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인종, 종교, 성별, 성적 경향과 같은 변화될 수 없는 점이나 자아의 가장 주요한 정체성에 관련하여 행해진다면, 이것은 주요한 전제인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신념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빈곤, 배척 그리고 실종

2005년 동안 국제 사회의 “빈곤 종식” 협약은 국제 강령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빈곤을 종식시키려는 정부 지도자들, 특히 아프리카의 의사 표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UN의 새 천년 15개 년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최우선 목표인 초등교육에서의 남녀 성 비 균등화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진정한 약속보다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인권 본질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는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빈곤을 줄이려는 각 국가들의 실천노력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이다. 각 국가들이 이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2005년의 경우, 세계 경제 생산량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지만 80억의 인구는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렸다. 적어도 천만명의 어린이들이 5세 이전에 사망하고 10억의 어린이들이(대개 여성) 초등 교육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였다.

9월에 열렸던 UN 세계 회담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정치적으로 화려한 발언과 진정한 공약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일부 회원국은 인권, 보안, 집단 학살, 빈곤 감소에 있어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하기조차 하였다. 다. 이전회의에서 서약되었던

사안들을 논의 하기에 바빴던 대표들은 기록의 이행과 발전 4분야인 평화, 안전, 인권, UN개혁에 대해 논할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다.

새 천년 개발 목표의 발전에 그 진전에 있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각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을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조건보다 일부 목표 기대치를 낮게 설정고 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평균 수명과, 건강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 상당한 향상이 있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자연재해나 여타 재해 시에 기아를 경감,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152개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이 국가들도 전 인구의 빈곤을 경감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필수적인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빈곤 수위가 국제 강령을 웃돈 2005년은 또한 극심한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난 해이기도 하였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여파는 재산손실, 인종간의 불평등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조차 빈곤이 존재함을 드러내면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프랑스의 이민자 소요사태는 수 십 년 간 지속된 이민자와 아프리카 혈통 프랑스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주목하게 하였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프랑스 정부는 통행금지 및 영장 없이 검문수색을 할 수 있는 법을 승인, 온갖 공공 모임 장소를 폐쇄하며“가택연금” 등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또 한편, 프랑스에 거주할 법적 권리가 있든 없는 소요사태 중 유죄가 입증된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빈부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최소한의 음식과 물, 교육과 의료 및 주거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풍요 속의 빈곤이 단지 재정의 부족만을 탓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아니다. 무관심, 제도상의 부패, 정부나 타 집단에 의한 차별은 빈곤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이들은 존경 받고 보호받으며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가 없다.

한 예로, HIV/AIDS를 앓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단순히 빈곤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차별, 오명, 여성 폭력,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품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무역 협정 및 특허권으로도 침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005년 동안, 항 RNA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한 개발 도상국 환자 중 15퍼센트 미만이 이 치료를 받았다. 이는 정부만이 아니라 정부간 그리고 기업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권을 위한 공동 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인권 실현 실패는 결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인권에 대해 가지는 책임을 논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인권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2005년 7월 UN 사무총장의 인권 특별 대표와 다국적 기업과 기타 회사의 임명은 한 발 전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즈니스에 관련한 UN 인권 규범에 토론이 있었으며 행동강령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권과 법적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세계 공통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에게 빈곤이 얼마나 인권 및 민권, 문화, 경제, 정치,

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방조하는지 또한, 빈곤 및 한계화가 폭력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의 빈민가(판자촌)에는 수백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조직화된 강력 범죄와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정부의 실패로 사회 배척은 되풀이 되고 있다. 빈민가 치안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무관심은 세계 최고의 살인수치를 기록하는데 일조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 사회를 범죄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미 빈약할 대로 빈약한 교육과 의료 등의 공공 복지와 고용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 예로, 많은 빈민가 거주자들은 실제 주소를 말할 경우 범죄자라라고 간주되기에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 마약 갱, 경찰이나 “죽음의 팀”이라 불리는 자경단원에 의한 무장폭력은 그들에게 있어 불가피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흡사 군대처럼 빈민가를 갑작스레 습격한 경찰은 폭력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사회 약자들의 삶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자국 내 권총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여부를 놓고 10월에 이루어진 국민투표는 실패하였으며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감과 경찰의 국민보호능력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보고 있다.

아이티에서는 무장집단과 자경단들에 의한 수많은 폭력, 특히 성폭력이 빈곤계층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끊임 없는 공격의 위협에 놓여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지극히 낮은 유죄판결 비율과 가해자를 밝히고 조사하는 데 공적, 사회적, 가족의 지지가 전무하기에 피해자들이 정의를 위해 나서지 않는 게 당연하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은 피해 여성들을 적절히 보호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

유럽 전역의 집시 집단은 흔히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거부당하며 종종 경찰이 가하는 폭력행위의 대상이 된다. 1992년, 슬로베니아에서는 영구 거주 호적 등기소에서 상당 비율의 집시들의 기록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삭제되었다. 그 결과, 집시들은 기초 공공 복지 혜택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국제 사회가 자연 재해 혹은 인재에 대처하는 데 있어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적시에 알맞은 도움을 제공함에 있어 실패하였다는 비난은 종종 있었다.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시하고자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정부는 자국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노력에 좌절을 안겨주었다. 원조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짐바브웨 정부는 UN과 민간 사회단체의 인도적인 차원의 원조를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차단하였다. 짐바브웨가 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받은 점이 있었다. 수십 만 명이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수만 명이 삶의 터전과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잃었다.

국가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2005년은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다. 아이티 소녀 Dilcia Yean 과 Violeta Bosico가 국적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 대해 미국 인권 법원이 내린 판결의 경우가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UN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와 정치의 동등한 기초 하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세우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또한 이로써 더 이상의 자의적인 인권 해석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침해를 안이하게 방치하는 실정에 일침을 가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길을 활짝 열게 할 것이다.

결론

AI는 진정한 인권 보호란 모든 권리인 민사, 문화, 경제, 정치, 사회적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서로 연결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권리라는 특성이 있다. 즉 어떠한 인권 보호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무시되는 또 다른 인권 정책 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호받고 있을 때에서만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류의 안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 인권의 전 범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인류의 안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 강대국들의 국가 안보 정책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거는 각자의 사례를 통해 힘이 실릴 수 있었다. 전 인류의 총체적인 인권은 인권 보호를 제한적인 정의로 접근 한다 던지 국가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면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통찰과 자국 및 세계적으로 이를 보호하려는 공동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법정 소송에서의 국제앰네스티의 개입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국내·국제 법정에 회부된 사건들에의 개입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법률적 이행을 추구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이란 상황에 있어 절대적 고문 금지령의 퇴보를 막는 것이 바로 2005년도에 행해진 두 번의 소송참가의 목표였다.

영국의 최고법정인 상원 항소심리위원회에서, 국제앰네스티는 14개 단체들과 연대하여 고문으로 인해 얻어진 정보의 증거채택을 허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참가를 시도하였다.

정부는 고문에 의해 얻어졌다고 해외에서 알려진 정보라 하더라도 영국의 법집행관들이 고문을 행하였거나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절차상 허용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대법관들은 영국의 법원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법정에서 채택될 수 없는 증거라고 판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있었던 한 소송에서는, 국제앰네스티는 누군가가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유럽인권조약 당사국 간의 강제이송은 계속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소송에 참가하였다. 4개국은 이러한 금지조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만 반테러행위와 같은 관심사에 대해 “형평성”검토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말 현재 본 소송은 심리 중에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폐지운동의 하나로 미주인권재판소에 회부된 과테말라에 관한 소송에 개입하였다.

1978년 미주인권협약에 비준한 과테말라는, 1996년 유괴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제도 확대를 추진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는 협약에 비준한 과테말라가 적용되는 법률보다 더 확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0년도에 법률안이 통과된 결과, 과테말라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죄에 대한 경감이나 사면, 또는 감형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9월, 미주인권재판소는 과테말라에 이 사건에 대해 사형집행을 연기하고 현재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유괴범에 대한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

무기 통제

무기 확산 및 오용 금지는 인권침해와 맞서 싸우는 AI 노력 가운데 핵심적 사안이며 이것은 갈등, 범죄, 안보 중 어느 과정상에 있던지 간에 변함없다. AI, 옥스팜(Oxfam), 소형무기 국제행동네트워크(IANSA)에 의해 2003년 시작된 무기통제 캠페인은 2005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말까지 50여 개의 정부에서 무기통제 캠페인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강제성 있는 국제적 무기 거래 조약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국제적 인권과 인도주의적 법률에 기반한 군비 규제 조약은 생명을 살리고, 피해를 예방하며, 생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코스타리카, 핀란드, 케냐,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은 이 조약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0월에 열린 유럽연합 외무부장관 회의에서는 그러한 조약에 대한 범 지구적 후원을 요청하였다.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는 규제 조약에 대한 UN의 독립된 협상이 2006년 후반까지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영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수의 국가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UN에서 각국의 정부는 2005년 10월 소형무기를 찾아내고 조사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것은 소형 무기를 찾아내고 무기 거래자들을 제지할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에 대한 무기 통제의 제안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합의는 탄약에 대한 사안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이다.

국제 무기 거래는 상당부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고, 대부분의 운반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도 새로운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접근 가능한 정보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게 된다. 전 세계의 군사장비와 병역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 국회의 한 권위적 보고서에 따르면 35개의 국가들이 세계 무기의 90%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까지 68% 이상의 무기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한다.

G8 국가들 중 6개의 국가가 세계 무기 수출국 10위권 내에 있으며, 8개 국가 모두는 주요 재래식 무기 또는 소형 무기를 개발 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G8 국가들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무기 수출 통제의 허점과 약점은 G8 국가가 빈곤의 재 생산에 동의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리하여 개발도상국의 안정과 인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G8 국가가 수출한 무기들은 세계의 최빈국 또는 분쟁지역의 손에 넘어간다. 이러한 국가에는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필리핀, 수단 등이 포함된다.

2005년 다량의 무기와 총탄이 발칸반도와 동유럽으로부터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002년에 시작된 평화 과정과 UN의 무기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기수송은 계속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정부에게 공급된 무기와 총탄은 이어서

전쟁범죄와 반 인류적 범죄가 난무한 콩고 동부의 무장세력과 민병대에게까지 배급되었다. 다른 범죄에 더하여, 이러한 무장세력들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야만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이스라엘, 러시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는 수많은 나라의 무기 판매업자, 중개인, 수송업자들이 이러한 무기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무기 중개와 매매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케 하고 있다. 2005년 말까지 단 30여 개의 국가들만이 이러한 중개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2005년에 소형 무기의 사용으로 죽어갔다. 아이티에서는 소형 무기가 납치, 강간, 살인을 저지르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무장 세력과 전직 군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무장해제와 희생자를 위한 정당한 처벌 없이 아이티는 범죄의 늪으로 더욱 가라앉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소형무기의 거래로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하였다. 가정 내에 총의 존재는 가정폭력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위험을 크게 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5년 무기통제 캠페인은 이러한 부적절한 무기 규제, 취약한 법적 시행, 그리고 여성들을 폭력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광범위한 차별들을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국제 사법정의

2005년에는 국제법적 범죄(집단학살, 비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고문, 비합법적인 처형과 강요된 실종)의 범죄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는 데 있어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국가들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불처벌이 계속 만연했고, 보편적 관할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다.

10월, 국제사법재판소(ICC)는 북 우간다에서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Lord's Resistance' 군의 다섯 명의 지도부에 사상 첫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우간다 정부에 분쟁 중에 저지른 수만 개의 다른 범죄를, 정부군에 의한 범죄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우간다 정부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우간다 법정의 심리를 배제하는 사면법을 폐지하도록 촉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계속해서 콩고에서 가해진 범죄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2005년 중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여덟 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의장과 검사는 자원의 부족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완결되기 전에 다른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제기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수단 다르푸르에서 일어난 범죄사건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한 것은 불처벌을 다루는 데 있어 긍정적인 움직임이었으나,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로마규정에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면제시키도록 한 결의안에 타협한 것은 실망스럽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항이 정의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만들고 유엔 현장과 다른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불처벌에 대한 투쟁은 일부의 압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제적인 노력과 그리고 국제화된 법정의 성과에 의해 강화되었다.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은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로 고발된 아홉 명의 용의자가 연루된 재판을 세 번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에라리온 정부는 (1999년 로메평화협정의 한 부분으로서 자국 내 국제범죄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면제하는) 이러한 사면을 종결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연합의 뚜렷한 지원을 등에 업고, 시에라리온 국민들에게 행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로 기소된 라이베리아의 전 대통령 Charles Taylor의 시에라리온 특별법정 인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특별법원”처럼 특별한 재판소를 설립하는데 있어 몇 가지 진전이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판소들은 크메르루주 집권 당시의 범죄자 중 6인 이하만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만 명의 다른 범죄자들은 국가사면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법원의 구성, 그리고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취약한 상황에서 캄보디아 판사들이 필요한 교육과 경력을 가졌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몇몇 국가의 법정은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한 입법(Universal jurisdiction legislation)을 이용하여 타국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통해 불처벌을 중단하려는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에서는 국제법 상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는 자국 내의 보편적 관할권 적용법률 하에 2000년에 첫 공판이 열렸으며, Desire Munyaneza를 1994년 르완다에서 저지른 대량학살과 비인도적범죄, 전쟁범죄로 고발하였다.

9월, 벨기에는 최소 4만명을 죽이고 계획적 고문과 자의적 체포 및 기타 범죄로 기소에 직면한 전 차드대통령인 Hissene Habre를 송환하도록 세네갈에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세네갈은 이 문제를 아프리카연합에 회부하였다. 1월, 페루의 전 대통령 Alberto Fujimori는 칠레에서 체포되었다. 과거 그는 치외법권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며, 또한 그를 페루로 송환하기를 거부한 일본에 의한 ‘실종’으로 기소에서 보호되어 왔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담 후세인에 대한 재판이 10월 이라크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정권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정의를 획득할 기회를 가진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재판소의 규정에 공정한 심판의 보장이 부재함, 적절한 상담에의 접근과 사형제도 조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 정의에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처벌을 다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2005년은 1995년에 Srebrenica의 유엔‘안전지역’이 보스니아-세르비아 군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8000명의 보스니아 무슬림이 대학살 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Srebrenica에서 행해진 범죄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대량학살로 인정되었고 그 당시 남편과 아들을 잃은 Srebrenica의 여성들은 아직도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그들이 재판소에서 조사하고 기소하기 불가능했던 수만 건의 범죄들을 다룰

효과적인 국가 재판소의 설립 없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을 중단하려는 노력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앞으로 벌어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비슷한 우려가 있다)

재판소와 법정이 용의자를 넘겨받는 데에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원 제공과 정치적 의지 표현 등을 통한 각국의 충분한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는, '사면'과 같은 기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분쟁으로 인해 국가사법체계가 파괴된 곳은 장기적인 재건계획이 긴급히 요구된다. 국제적 사법 소송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국가들은 여전히 그들이 국제법상의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난민과 망명자 그리고 실향민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5년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적이고, 단순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현실은 더 암울하였다. 현재 가장 최근의 수치인 2004년의 통계 기록에 따르면 난민의 숫자는 거의 지난 25년에 걸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난민의 수가 감소한 것은 크게 볼 때 출신국(country of origin)로 돌아간 난민의 숫자 때문이지만, 이들 모두가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상당수의 경우 귀국은 비자발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도 못하였다.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통틀어 5백만명이 출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중에는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부룬디, 이라크, 리베리아로의 귀국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지만, 이들 나라들은 생명의 안전과 인격적인 생활이 언제나 보장되지는 않는 곳이다. 국제난민보호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이 원칙은 해당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사회나 개별 정부 모두가 난민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작 난민의 권리는 간과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망명자들이 신체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사항의 경우 공정한 심의 절차 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가령 그리스의 경우 2004년에 단 열한명 만이 난민으로 인정되고 무려 3,731명의 난민 지위신청이 거부당하였다. 영국의 경우 단기 속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무려 99 퍼센트에 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난민 수용소나 국경 지대의 부정부패로 인해 망명신청자들을 임의적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중국에서는 수백명, 어쩌면 수천명에 달할 수 있는 북한 탈출자들이 망명 신청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체포되어 강제 추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의 경우 신변 보호를 위해 국경을 넘는 이들의 숫자는 줄어든 반면, 자국 내에서의 실향민들(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의 수는 2천5백만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실향민의 다수는 수년 동안이나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국가들은 국제단체에서 자국내의 실향민들이 처한 조건과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여전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UN 사무총장이 지난 2005년 3월 발표한 새천년개발계획(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 <보다 큰 자유(In Larger Freedom)>에서는 실향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간(inter-agency)의 대응 능력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등장한 "cluster approach"(역주- 여러 기구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UN 관계기관)은 현안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더 예측가능하고, 확고하며 일관으로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실향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수용소에 체류하는 난민의 생활 조건은 2005년에 들어 더 악화되었다. 특히 많은 이들의 식량 배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난민을 보호하고 후원하는 책임을 공유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각국의 정부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종종 가정폭력을 포함 여성에 대한 폭력이 늘어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식량을 배급 받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 난민들은 여전히 수용소 바깥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으며, 생계를 꾸릴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난민을 수용소에 배치하는 정책이 난민들의 권리와 삶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도시 지역의 많은 난민들은 법적 지위와 일할 권리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심각한 빈곤에 허덕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각국 정부가 난민 보호의 의무를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테러와의 전쟁”에 관련된 논의는 국경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그릇되게도 정치인과 매체가 외국인혐오증과 민족차별주의를 부추기며 난민과 테러리즘, 범죄를 연계시키면서 망명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3000여명의 정부, 여성 및 인권 단체의 대표들은 지난 2005년 3월 뉴욕에 모여 베이징세계여성회의(the Beijing UN World Conference) 10주년을 기념하고 베이징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를 가늠하였다. 각국 정부들은 한결 같이 십 년 전 자신들이 한 공약과 더불어,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못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패는 부분적으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퇴행적인 공격의 결과로서, 이러한 공격은 최근 수년간 명백히 드러났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공격, 특히 여성의 성과출산의권리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후원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도하고 바티칸(the Holy See)과 이슬람제국회의기구(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AI가 2005년 내내 전세계의 여성 단체들과 함께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협력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공격과 변화된 지구적 안보 환경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을 실행하려는 국가들의 의지 부족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진척을 거둔 분야로서는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완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새로운 형법 조례를 신설하여 혼인 관계의 경우 신부 납치(bridal abduction) 및 강간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없앴다. 쿠웨이트 의회는 선거법을 수정하여 여성의 투표권과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AI는 아프리카에서의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 관한 의정서의 발표를 환영하는 바이다. 솔로몬 군도의 여성 단체들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용도의 쉼터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공표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진 여성들의 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차별과 여성 폭력과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자유와 안전, 정의에 대한 여성의 기본 권리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폭력을 저지하고자 하는 AI의 캠페인은 2005년 동안 주로 전쟁과 가정에서의 폭력 그리고 여성 인권 옹호자에 대한 폭력 반대에 전력을 기울였다.

위원회의 운동이 점차 밀접한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사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AI는 각국 정부가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 존중, 촉진하며 성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AI는 아프가니스탄, 과테말라, 걸프만 협력 위원회 국가들(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과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점령 지역, 나이지리아, 러시아 연방,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권총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및 여성과 폭력 그리고 보건의 상관관계 또한 다루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2005년 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요 연구 또한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AI의 2005년 보고서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6)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정치적 고통을 초래하며, 그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과 안전에도 반향을 일으킨다는 점을 주장한다. 인권 문제로서의 여성 폭력과 공중보건의 위기로서의 여성 폭력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AI는 여성과 AIDS에 관한 UNAIDS 국제 연대 지도부 (the Leadership Council of the Global Coalition on Women and AIDS)에의 참여 초청을 수락하게 되었다.

2005년 새모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회의에서는 전 인류의 인권 신장에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점과, 이들이 살해, 유괴, 강간 및 “실종”, 비방과 같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인식하였다.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이들은 종종 이들의 적극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소외와 편견 그리고 위협에 직면하곤 한다. 환경권이나 성적 권리와 같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은 특히 2005년 이러한 위협을 직면했으며, 현재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들로 간주되었다.

여성 폭력을 퇴치를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은 2005년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UN 위원회의 두가지 결정안에 잘 나타나 있다. 멕시코의 도시 사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arez)에서는 근 몇해동안 당국의 적절한 조치도 없이 대다수가 원주민인 가난한 여성들이 수백명이나 유괴 및 살해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형법 절차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개정과 함께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를 다루는 대중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 헝가리 여성은 헝가리의 전(前) 법적 남편이 가한 일련의 폭력으로부터 정부 당국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권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사·처벌해야 할 정당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폭력의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사형제도

2005년, 적어도 2,148명의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적어도 5,186명이 사형당할 운명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AI에 알려진 사례들만 반영한 것이다. 분명히 실제 수치들은 더 높았을 것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고통을 못이겨 범행을 ‘자백’한 것이며, 적절한 법적 진술이나 공평한 청문절차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마약 밀수, 횡령 그리고 사기는 사형집행이 내려지는 범죄에 속한다. 바로 형이 집행되는 사형수도 있지만 20년이 넘게 사형선고 후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다. 사형집행인이 형을 집행하는데 이용한 방법은 교수형, 총살형, 치사주사, 참수형 등 다양하다. 형이 집행된 자들 중에는 어린이 정신 지체자 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해, 몇 안 되는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2005년에 형 집행의 94%는 중국,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다.

2005년에 멕시코와 리베리아는 모든 범죄들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했고, 이로써 사형 폐지국가의 수는 86개가 되었다. 1977년은 미국이 사형제도를 재개한 해이다. AI가 스톡홀름에서 사형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당시만 해도 16개국만이 사형제 폐지국가였었다. 2005년 말에 이르러서 법적이든 관행상이든 122개국이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다.

사형제 폐지 캠페인은 2005년의 운동과정에서 한층 역량이 강화 되었다. 2005년 10월 10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에 반대하는 제삼세계 국가는 50개 이상의 국가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베닌, 콩고, 중국 (홍콩), 콩고 민주 공화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말리, 푸에르토리코, 시에라리온, 토고와 같은 국가가 포함된다. 전세계에서는 사형에 반대하는 시위, 청원, 콘서트, 그리고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40개국의 AI 회원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가해왔다.

또한 UN 수준에서의 진전도 있었다. 2005년 4월에 통과된 사형제 문제에 대한 UN 결의안 2005/59는 사형제를 인권 폭력으로 간주하여 비판하고 있다. 본 결의안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하며 특별히 사형제 폐지가 명백하게 “생명권의 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임을 선언하고있다. 결의안 2005/59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인 81개의 UN국가들에 의해 상호 지원되었다. 2005년 성명서에서 전문 보고자(The Special Rapporteur)는 비합법적이거나 약식으로 치러진, 혹은 독단적으로 선고된 사형집행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본 성명서는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형 집행에 대하여 강한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형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관용을 베풀거나 참작 혹은 형기 경감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 법원의 자유를 빼앗았으며 이러한 강제적인 선고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부당하였다고 비판한다.

사형제 반대에 있어서의 강력한 논쟁 중의 하나는 결백한 이들에게 가해 질 수 근본적인 위험에 있다. 2005년 중국과 미국은 오판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을 석방하였다. 중국 역시 죄가 없던 이들에게 형이 집행되었던 점을 시인하였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부당한 판결로 인한 처형이 집행되었다. 2005년에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이 집행된 이들에게는 적법한 법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충분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인종, 종교, 빈곤과 같은 넓은 범위에 걸쳐진 특징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차별은 사형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사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때때로 이러한 정보는 언론뿐 아니라 희생자에게서도 비밀로 붙여지고 있다. 일본은 수감자들이 죽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그들이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또한 4월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처형당한 6명의 소말리아 국민들은 참수형당하기 불과 5시간 전까지 그들이 처한 위험을 알지 못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2005년에 국제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사형제로부터 보호되는 청소년범죄자, 심신상실자 등의 그룹의 멤버들조차도 처형당하였다. 미국에서는 1977년에 사형제가 재개된 이래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1000번째로 죽은 사람은 거의 정신이 이상해 졌다.

이란에서는 18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적어도 8명의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적어도 2명의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교수형당하였다.

2005년 3월 1일 미국 최고법원은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가운 판결을 내렸고, 덕분에 70명이 넘는 사형 선고받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고법원의 판결은 청소년기에 억류된 관타나모 억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김정일

정부수반: 박봉주

사형제도: 존속

국제 형사 재판소: 미 가입

유엔 여성 협약: 비준

유엔 여성 협약 선택의정서: 미 가입

표현, 집회,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들이 계속하여 부정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공개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감금, 고문과 가혹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독립적 감시활동을 위한 접근도 차단되고 있다.

<배경>

3월,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다.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 회담(북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이 해외원조와 안보를 조건으로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합의사항을 실행시키기 위한 진전은 없었다.

<국제안보>

4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것은 지난 3년간 3번째 결의안이다. 11월 유엔총회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8월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북한정부가 고문, 재판 없는 구금, 공개 처형과 사형제도를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7월, 유엔 여성 차별철폐 위원회가 북한의 최초 정기보고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북한 정부의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부재, 그리고 피해자 발생 예방과 보호를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정부가 기아와 자연재해가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음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아래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매춘과 같은 착취상황에 빠져들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접근 차단>

정보와 그에 대한 접근이 계속하여 매우 강하게 통제되고 있다.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유엔특별보고관과 적정한 식량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과 같은 독립적 인권 감시단의 접근을 계속 차단해오고 있다.

<사형>

정치 수용소에 수감되어있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사형과 음식을 훔치는 것과 같은 생계 범죄관련 사범들에 대한 사형이 새로이 보고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처형되고 있다고 한다. 2월에 있었던,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약 70명의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1월에 공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명이 공개 처형에서 총살당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가 공개됐다. 이 공개 처형은 3월 1일 북한의 북동쪽 지역인 회랑에서 인신매매와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중국 방문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11명에 대한 공개재판 이 후 실시 되었다.

<고문과 가혹행위>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수백 명의 북한주민들은 구금과 고문 및 가혹행위 당하고, 끔찍한 환경아래 3년까지 감금을 당하게 된다. 보고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정치범들을 위한 노동 수용소와 비좁은 교도소에서 영양부족으로 죽고 있다. 감옥의 규칙을 어긴 수감자들의 음식의 양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구금중인 여성들>

여성 재소자들은 계속하여 굴욕적인 수감 환경하에 놓여 있다. 교도소는 여성의 필요를 위한 기본적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임신한 여성 재소자가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고 한다. 여성 재소자들은 재판 전 수감 상황에서 남성 교도관들이 그들을 모욕하고 부적절한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항거한 여성들은 구타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신부,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밭이나 교도소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표현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7월, 64세의 문성준씨가 평양 북쪽 지역인 신의주에 있는 비밀교회를 이끈 혐의로 체포되었다. 문성준씨의 형제, 자매 8명을 포함하여 적어도 80명의 주민들이 감금되어 교회를 다녔다는 혐의로 수감되고, 심문 받았다.

<아시아내 북한 주민>

수 백 명의 북한주민들은 중국정부에 의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기 위해 베이징의 외국인 학교나 외국공사관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2005년 말, 100명 이상이 외교공사관에서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의 북한여성들은 강제결혼과 성 산업으로 인신매매 되는 것을 포함하여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정부 당국이 남한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북한 난민들을 강제 본국송환시키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중국에서 북한주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북한 정부의 타겟이 되었다.

3월, 남한에 정착했던 강건씨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으로 도피했던 북한주민들을 도와주다가 중국 지린성의 통징의 북한관리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양의 국가보안청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식량권>

3월에 북한당국,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에 의해 국가영양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의 7퍼센트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고, 37퍼센트는 만성적 영양실조상태에 있었으며, 23.4 퍼센트는 체중미달이었다. 3명중의 1명의 어머니들이 영양실조와 빈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극도의 취약 상태는, 기본 식료품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수백만 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급격히 낮추어 노동자들을 잉여노동자나 파트타임 노동자로 전락시킨 2002년 중반에 실시된 경제 조정조치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2004년에 3배 오른 곡물의 시장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9월, 북한 정부는 2005년 풍작을 인용하면서 인도주의적 원조를 멈추고, 더 많은 개발 원조를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세계식량계획 감시단이 북한을 떠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식량원조 감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남한에 의해 제공된 양측의 식량원조의 절반이 예정된 수령인에게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부의 요구에 의해 세계식량계획은 12월 북한 내 5개의 지역 사무소와 19개의 식량공장들의 문을 닫았다.

한 국

국가원수: 노무현
정부수반: 이해찬
사형제도: 존속
국제 형사 재판소: 비준
유엔 여성 협약: 비준
유엔 여성 협약 선택의정서: 미 가입

난민승인절차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겪게 되는 위협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제출되었다. 최소한 63명의 죄수들이 사형선고를 받아 복역 중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양심수들 가운데 최소한 여덟 명이 석방되었다. 양심수들을 구금해 온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이십만 명의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가 구금 및 추방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임금과 사법체계에 대한 접근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최소한 천 구십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복무를 거부한 대가로 실형을 살고 있다.

< 난민과 망명신청자 >

난민인정절차에는 투명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으며 망명 신청자들이 겪게 되는 위협 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최초로 망명이 승인되었던 2001년 2월에서부터 2005년 말까지 불과 40명의 신청자에게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15건이 2005년에 이루어졌다.

망명 신청자에 대한 수감 정책은 모호할 뿐 아니라 자의적이기 까지 하다. 5월에 발효된 출입국관리법 하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3년 이상 기간의 유효한 체류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청서가 심사될 때까지 구류 및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청자들은 본인 건과 관련한 판결의 근거에 대하여 통보 받을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춘 통역관을 비롯한 충분한 지원 및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 3월 관련당국은 2000년 5월 아홉 명의 미얀마 국적자들이 제기한 난민 신청

을 기각했다. 4월에는 그들에게 닷새 내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졌다. 7월에 있었던 항소를 통하여 그들은 2006년 4월까지 체류하도록 허락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미얀마에서 반정부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만일 그들이 미얀마로 돌려보내 진다면 한국정부는 그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 위기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면담 당시 통역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은 진술서에 서명을 첨부해야 했다. 변호인단은 진술록의 내용이 일부 생략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항의했다.

<이주 노동자>

2004년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발효된 이후 이주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강화된 듯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임금과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광범위한 차별을 받고 있다. 대다수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임금이 체불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긴급 체포 및 추방 대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십만 명에 달했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새로운 이주노동자조합 대표인 안와르 후세인씨가 지난 5월, 30여 명의 출입국관리소 직원 및 경찰들에 의해 체포 되었으며 보고된 바에 따르면 폭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그는 체포되기 전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신문 지상을 통해 비판한 바 있다. 안와르씨는 2005년 말 현재 전주 출입국관리소 관할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

< 사형제도 >

사형 집행은 없었다. 적어도 63 명의 죄수들이 사형선고를 받아 복역 중이다. 2004년 12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75명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여 2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였다.

< 국가 보안법 >

8월에 있었던 대통령 특사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선고 받았던 최소한 여덟 명의 양심수가 석방되었다. 최소한 두 명의 장기수가 국가보안법으로 복역 중이었다. 2003년 8월 간첩혐의로 6년형을 선고 받았던 75세의 강태운씨는 현재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형기는 8월에 반으로 감해 졌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적행위” 또는 “반국가” 행위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비폭력적인 정치 활동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형이나 사형을 구형할 수 있게끔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국보법 철폐에 대한 지지가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국보법의 수정이나 철폐를 보류하고 있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 >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이루어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가운데에서 2005년 말 기준 최소 1090명이 병역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 상태에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소식 :

임태훈씨가 지난 6월 석방되었다. 그는 평화주의 신념과, 군에 의한 양성애자 및 동성애자 차별 등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부하여 2004년 7월 체포되었고 18개월 형을 구형받았다.